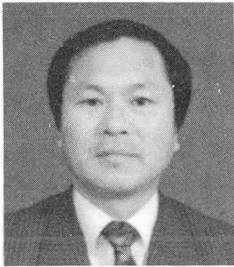


양돈업 허가상한선



전재명
(본회 전남도협의회장)

'93년 연초부터 농림수산부의 입법예고 발표가 되면서 양돈인 모두가 불안과 긴장감에 쌓여 있었다. 양돈업에 사육두수 제한규제를 해제하는 일에 대하여 현행 축산법 제27조에 명시된 허가상한선이 10,000두(모돈 1,000두)로 정해지게 된 동기를 돌이켜 보고자 한다.

양돈업계의 불황으로 인하여 영세 양축가들이 쓰러지고 난 후에 그들의 농토를 대기업이 모두 차지하여 농민의 생업을 짓밟으면서 부익부를 누리게 되자 이를 저지하고 농민의 생업을 지켜주기 위하여 이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정당국에서는 행정규제 완화를 이유로 이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재벌 기업 양돈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양돈인들과 축산인들이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돼지 사육두수 허가상한선 철폐안은 대기업에게는 토초세와 농지 양도세면에서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며 정부는 몇몇 대기업의 농장만 잘 운영하게 되면 물가통제도 용이하고 국제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발상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축산이 생업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하는 농장경영이 국내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국내외 양돈산업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정부에서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신농정을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몇몇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농축산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가뜩이나 소득 환불이 부족한 우리의 농촌을 누가 지키라는 것인지 묻고 싶었다.


철폐에 관한 우리의 견해

UR협상의 타결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양돈협회 전국 임원·지부장 회의에서는 축산의 마지막 보루인 양돈산업마저 재벌의 손에 넘겨주려는 농림수산부의 정책에 절대 반대를 결의하고 양돈 상한선 철폐 저지 대응책 마련을 중앙회 회장단에 일임했었다.

그동안 본회의 모든 회원은 사육두수 허가상한선 철폐에 끈질기게 반대했고, 이에 농림수산부에서는 허가상한선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법시행령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게 되었다. 당국의 현명한 결정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또한 그동안 중앙회 회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인은 지난 '90년을 돌이켜 보고자 한다.

우리 전국 전업·부업 양돈인들은 가격 연동제 폐지를 얼마나 반대했던가?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는 고급육 등급제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끝내는 폐지하고 말았다. 그리고 연동제를 폐지하고 난 이후 고급육 등급제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실시되지 않고, 그러는 동안에 생산자와 소비자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정부와 농업단체는 농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렴하여서 이번 상한선 폐지와 같은 정책으로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함으로써 수많은 농민을 불안에 떨게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한가지 바란다면 정부는 하루 속히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이 제도가 실시되기만을 기원하고 있는 모든 양돈인들과 축산인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 

“

정부에서 '돌아오는 농존'이라는 신농정을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몇몇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농축산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가뜩이나 소득 환불이 부족한 우리의 농존을 누가 지켜라는 것이지 묻고 싶다.

”